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2025년 5월 보도자료(<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



I

국립재활원, '4차 스마트돌봄스페이스'와 '목욕 스마트돌봄스페이스' 개소식 개최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은 5월 2일(금) 국립재활원 누리관 2층에서 장애인과 노인의 일상생활 보조 및 돌봄부담 감소를 위한 '수요자 중심 돌봄로봇 및 서비스 실증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4차 스마트돌봄스페이스와 목욕 스마트돌봄스페이스의 개소식을 개최했다.

- 스마트돌봄스페이스는 돌봄로봇에 대한 현장실증을 수행하고 장애인과 노인, 돌봄자가 시범적으로 거주 체험을 할 수 있으며 돌봄로봇 전시체험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공간이다.
- 이번에 개소된 4차 스마트돌봄스페이스는 돌봄로봇과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병실환경을 고려하여 구축됐다.

* 사용자(장애인/노인) 데이터 수집을 자동화하여 혈압, 체온, 혈당, 수액 투여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는 서버/클라우드에 저장 되도록 구축

- 병실환경과 유사하게 간호사 호출(너스콜) 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사용자(장애인/노인)와 돌봄자에게 필요한 낙상 및 자세변화 감지가 가능한 모니터링 센서, 체중 모니터링이 가능한 전동침대, 별도의 슬링이나 레일 등의 제한 없이 자유로운 범위로 이동이 가능한 이승기기 등의 돌봄기기를 배치하였다. 이를 통해 병실 환경에서 돌봄로봇 실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 휠체어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에 걸맞도록 높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대를 설치하였고, 현관 및 욕실에 자동문이 설치되었으며, 위생을 위해 세면대를 추가 설치하였다.

- 목욕 스마트돌봄스페이스는 시설, 병실, 가정 등의 목욕 돌봄로봇* 및 기기 실증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돌봄부담이 큰 분야 중 하나인 목욕 돌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 미세 입자의 미스트를 분사하는 형태의 목욕 돌봄로봇과 휠체어를 도킹하여 욕조 기울임 기능을 통해 쉽게 입욕할 수 있도록 도와 물이 담긴 욕조 속에서 목욕할 수 있는 방식의 목욕 돌봄로봇 배치하였음. 다양한 돌봄로봇에 대한 사용성평가를 포함한 실증연구를 통해 돌봄부담 분석을 수행

- 또한 목욕 돌봄로봇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여 분리된 두 공간으로 설계하였고, 배수시스템 및 트렌치 커버(배수로 덮개) 크기, 출입문의 너비와 종류 등을 고려하여 설계됐다.

■ 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은 “스마트돌봄스페이스는 돌봄로봇의 실증, 실거주체험 장소, 돌봄로봇 전시체험 공간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과 노인 관련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연구를 선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한편 이번 개소식에서는 ‘장애인 주거환경과 스마트 돌봄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가 함께 진행되었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 세미나에서 (사)한국유니버설디자인협회 우창윤 회장은 ‘유니버설 디자인을 고려한 스마트홈과 돌봄로봇’에 대해, (사)햇살드림 정영만 사무처장은 ‘실생활 기반의 통합적 스마트 돌봄 체험공간 마련 및 서비스 모델 개발’에 대해 다루었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2968. 재활보조기술연구과. 2025. 5. 2.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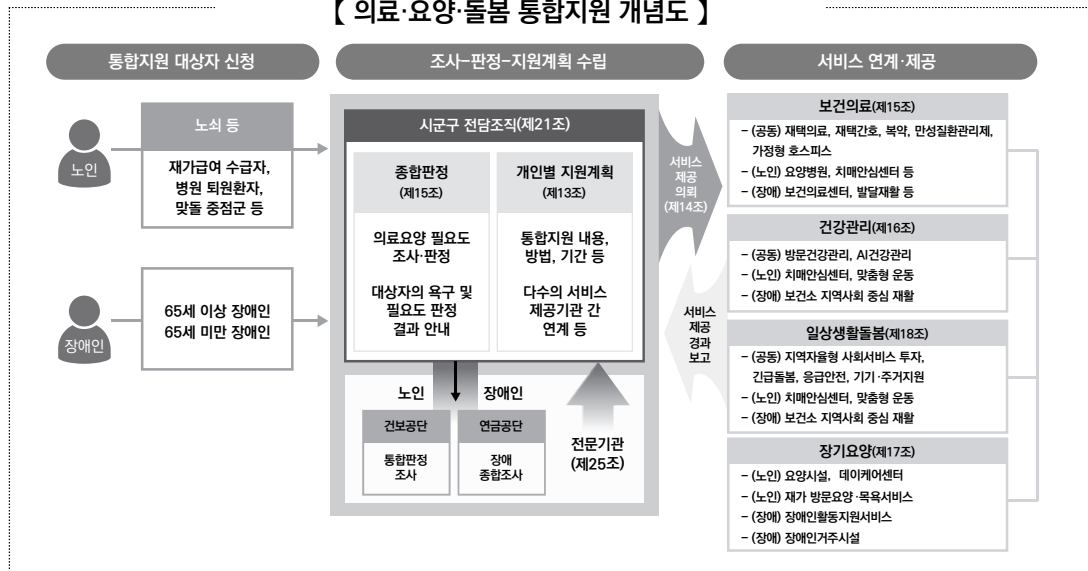
100개 시·군·구가 함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기반을 구축한다

- 「2025년 제1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53개 선정 (47개→100개)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 제1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참여 지방자치단체 53개를 선정했다.

■ 동 시범사업은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26.3.27.)에 앞서, 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 종합판정 적용, 전문 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을 우선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경험하며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개념도 】



■ 보건복지부는 2025년 4월 11일부터 24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하였으며,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지역 특성, 광역·기초 협업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53개 시·군·구를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로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47개 시·군·구를 포함하여 총 100개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 신규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시·군·구는 ▲(서울) 동대문구·종랑구·성북구·도봉구·노원구·서대문구·천구·관악구·강동구, ▲(부산) 중구·동래구·남구·사하구·사상구, ▲(대구) 서구·달성군·군위군, ▲(광주) 동구, ▲(대전) 동구·서구, ▲(울산) 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 ▲(세종) 세종시, ▲(경기) 수원시·용인시·남양주시·안양시·시흥시·파주시·의정부시·이천시·동두천시, ▲(강원) 태백시·고성군, ▲(충북) 충주시·제천시·보은군·옥천군·영동군·단양군, ▲(충남) 태안군, ▲(전북) 익산시, ▲(전남) 나주시·무안군·신안군, ▲(경북) 고령군, ▲(경남) 창원시·진주시·거제시·남해군이다.

■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내실 있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5월 시범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1:1 컨설팅, 통합지원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교육, 전문기관 협업 등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조직 구성 등 사업 준비를 거쳐 2025년 7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수행 및 서비스 제공을 하게 된다.

■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53개의 신규 지자체를 포함해 총 100개의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 본사업의 안정적인 준비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라며, “특히, 모든 소관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강조했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3056. 노인정책과. 2025. 5. 2.

III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5월부터 더 확대한다

- 5월부터 청년층 자살시도시 관련 치료비 지원 요건 추가 완화(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지정 응급실 → 전국 응급실)-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부터 15~34세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 15~34세 청년층 중 자살시도 또는 자살 의도가 있는 자해 행동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 청년층은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자살시도율*을 보이고 있어 그간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초기 개입 및 사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우선 작년 7월부터 소득 요건(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폐지하였다. 올해 5월부터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내원 요건을 폐지하여 전국 어느 응급실을 내원하든 관계없이 연간 1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중 59%가 10~30대 자살시도자('23, 국립중앙의료원)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기관으로, 사례관리자·응급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으로 구성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심리검사·상담비,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치료비 등 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 지원

-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살시도자, 자살자의 유족에 대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시행하는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자살시도자의 경우에는 전국 응급실 중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지정된 응급실에 내원 후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하여야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청년층의 경우에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응급실이든지 자해·자살시도로 내원하면 관련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 초기 평가 및 자살위험도 평가, 자살위기 상담 서비스 등

- 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청년층 자살시도자는 자살시도로 인한 응급실 내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본인 거주지의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신청 시기는 지역별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지역 자살예방센터로 문의 필요

-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청년층은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자살시도율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 치료 이후 후속 사례관리 체계 유입을 강화하기 위해 치료비 지원 요건을 완화하게 되었다.”며, “적극적인 치료와 사례관리를 통해 청년층 자살시도자가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3076. 자살예방정책과. 2025. 5. 12.

IV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안전한 양육 출산 지원 위한 민관 협력

-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주)한진, 위기임산부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 (주)한진(사장 조현민, 노삼석)은 2025년 5월 15일 (목) 오전 10시에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진 본사 대회의실에서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협약식에는 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 한진 조현민 사장, 한진 노삼석 사장이 참석하였다.

- 이번 ‘위기임산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은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졌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주)한진은 위기임산부가 출산 양육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하게 된다. 또한 택배 네트워크 활용*하여 1308 상담번호 등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신보호출산제의 안정적 운영, 상담체계 홍보, 후원금 관리,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 1308 상담번호가 인쇄된 택배 포장 테이프 활용, ▲ 택배차량 포스터 부착, ▲ 택배배송 알림문자 내 배너광고 삽입

- 그간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해 '24년 7월 19일부터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위기임산부는 1308번호로 연락하게 되면 가까운 지역상담에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한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제도를 연계 받을 수 있다.
- 제도 시행 후 '25년 4월까지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에서 1,552명의 위기임산부에게 5,995건의 상담이 진행되었다. 심층상담 결과 원가정 양육 선택이 138명으로, 보호출산 87명보다 많았고, 특히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상담을 통해 19명이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여 위기임산부의 원가정 양육지원과 아동의 생명권 보호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이번을 협약을 통해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위기임산부들에게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고, 상담기관을 찾아온 위기임산부가 더욱 촘촘하게 지원을 받아 아동에게 안전한 양육환경이 제공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한진 조현민 사장은 “1308이라는 번호가 위기임산부와 아동들에게 생명의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한진의 물류사업 역량과 인프라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이번 협약이 위기 상황에 놓인 산모와 아동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마련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3086. 아동정책과. 2025. 5. 15.